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 후 식



임기를 불과 10개월여 남겨둔 전남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행태가 접미가경이다. 계과 간 ‘갑투싸움’으로 지난달 1일 집행부와 역대 의장까지 초청한 개원식을 무산시킨 데 이어 의장 불신임 파동, 의장 나눠먹기 밀약, 돈 선거 의혹, 일부 위원들의 이권·인사개입, 위장전입 논란 등이 고구마 덩굴처럼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헐뜯고 기를 쓰며 싸우는 아귀다툼 형국이다. 본분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맞전이고,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주민들이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이전투구’ 두 달째 파행

파행의 발단은 일부 교육위원들이 서건용 전 의장에게 중도 사퇴 압력을 가한 것이었다.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은 개원식 보이콧에 이어 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했다. 표면적 사유는 리더십과 자질 부족, 비서진 정실 채용 등이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의장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의장직 나눠먹기’ 밀약이 지켜지지 않은 게 그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전남교육위 성역없는 수사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서 의장은 거세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 과정에서 임태원 반목의 불씨는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서 의장이 지난달 15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일부 위원들의 인사·이권개입 행태를 지적하자 이튿날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또 위원이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우리를 매도하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서 의장은 “난 부끄러운 게 없다.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A위원회에 받

은 5천만원도 모두 돌려줬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선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위는 결국 임시회를 열어 의장사임 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법으로 보장된 의장 임기(2년)를 무시한 채 ‘갑투 나누기’를 강행한 것이다.

후임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는 나승욱 위원이 2006년 11월 선거구 주소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나 퇴직 조치되는 사실 조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나 위원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상당수 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장 선거를 겨냥한 계략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 전남교육위원 9명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전남’일 뿐 사실상 ‘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위장전입 의혹이 이는 등 교육위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4년 임기의 제5대 전남도교육위원 가운데 위법 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나 위원뿐만이 아니다. 2006년 7월 선거에서 선출된 9명 중 벌써 절반에 가까운 4

명이 선거운동 과정의 금품제공 등이 드러나 당선 무효 됐고, 차점자들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전체의 절반 의원직 상실

이런 상황에서 갖가지 추문과 의혹에 대한 해명은커녕 막판 ‘자리다툼’에만 골몰하는 교육위원들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벌써부터 사상 처음 직선제로 실시되는 내년 6월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도 “교육위원들이 전체 교육 공무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오는 24일 김장환 교육감 퇴임 이후의 상황이다. 전남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잭밥에만 관심을 쏟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행정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은 금품선거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한 진위를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

교육위원들도 지방교육자치의 참모과 품위유지·청렴 의무를 규정한 윤리강령을 되새겨 통절한 자기반성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단적 고해성사라도 하길 바란다.

〈사회부장〉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최 희 동



다산 정약응은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의 대학자요, 사상가다. 다산의 진면목은 ‘목민심서’를 읽으면 더욱 뚜렷해진다. 다산은 서문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외면한 채 자기 배만 채우는 관리들의 의식과 행태를 바로잡고 모범적인 지방관의 상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단체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했고, 목민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경우를 보면서 ‘목민심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단체장

어떠할까? 지금 다산이 다시 살아나 ‘목민심서’를 저술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쓰지 않을까? 단체장의 가장 큰 덕목은 애민과 애민의 정신이다. 늘 지역과 지역민을 우선시하고 모든 권력이 주민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앙에 풍부한 인적지반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의 주장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신(新) 목민심서

의 역량과 비전에 달려 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한 도시들을 보면서 단체장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는 요즘이다. 호남에서는 아직도 ‘허송세월’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정권의 집권기라는 절호의 기회를 단체장의 무능과 아이디어 빈곤으로 인해 제대로 살리지 못한데 따른 사·도민들의 질책과 한탄의 말이다. 정권이 바뀌어 호남 흥대를 꺾으면 서 단체장의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역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고 ‘상주 정치(喪主政治)’만 한다는 비난도 일어난다. 호남지역의 단체장에 대한 중앙의 고위관료들의 평가는 차마 옮기기도 민망스럽다.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탓하면서도 자신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거나, 입으로는 청렴을 말하면서 자신의 발은 사당창에 담그고 있는 일부 단체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민심은 자꾸 멀어져가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다산의 심경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 고

박 인 종



값어가는 이 가을에 도시 숲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늘과 단풍을 제공하고 CO2와 미세 먼지를 흡수하며, 산소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가치만을 제공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도시의 숲은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무 한그루씩 정성을 다해 심었기 때문에 현재의 숲이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나무들이 커가면서 울창한 숲으로 변모해 역사를 만들어내고 음악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도 만들어낸다. 숲이 없는 도시는 경쟁력 저하로 죽

숲 속 도시의 가치는 시민이 올린다

은 도시가 되지만 숲이 울창한 도시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싱그러움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가 돼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광주시는 2003년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색이 변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하고 열심히 숲과 공원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한 행정으로 현 정부 패러다임인 녹색정책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 중에 있다. 그동안 교통선 등 공한지복합,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가로 숲 조성’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변모시킨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만남과 소통공간이 된 ‘금남로·화정·상록·우산공원’ 및 산책과 여윌로움이 있는 ‘푸른길 공원’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 개방한 시청 건너편 미관광장 숲은 광주시의 명품 숲으로 탄생하였고 폭포와 나무,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물장구를 치는 어린이들과 산책과 운동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만큼 빨리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할 당위성을 바탕으로 숲과 공원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금남로·화정·상록공원과 푸른길 공원 등의 도심 내 굵직한 거점공원 또한 사업은 우리 시 숲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행정 최고책임자의 큰 결단과 관계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 우선시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생활권 주변이 화색빛에서 푸른 숲과 아름다운 꽃물결이 넘치는 도시로 변하였으나 앞으로는 더 변해갈 것이다. 훗날 문화, 관광이 선순환 하는 숲 속 도시는 미래 세대들에게 살맛나는 도시로 다가서리라 확신하면서 시민 모두의 긍정적 참여를 기대해본다.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골다공증 치료 어렵게 하는 건강보험체계 바뀌어야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의 고관절 골절은 남성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고관절 골절로 인해 1년 이내 사망하는 사망률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골절과 허리뼈, 골반 골절을 합치면 뇌혈관 질환 다음으로 두 번째 많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이 골다공증의 치료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골다공증 진단 기준은 골밀도가

평균값의 -2.5표준편차 이하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는 -3.0표준편차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 문제는 보험금여가 1년에 6개월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병률과 심각성에 비해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서의 골다공증 치료는 그 제한을 좀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의료선진국이라는 명칭에 맞게 이런 부분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함미경·목포시 수강동

시 설

혁신도시 부지매입 미루는 저의 원가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이전 대상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양대 이전 대상기관인 한전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전에산을 확보해 놓고도 부지매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최근 수정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재판(再版)이 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한전은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 비용 169억원을 책정했지만 적자를 이유로 이를 내년 예산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과 함께 최대 이전대상기관인 농어촌공사도 이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대책이 마땅치 않으니까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는 방법을 찾는 꼴수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이 부지매입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세종시 수정논란에서 보듯 정부부처와

공기업 지방이전 재검토라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전 대상 규모와 시기를 재조정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17개 이전대상 기관도 뚜렷한 이유없이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계획대로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선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 차질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 간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법적, 행정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심각한 국론분열과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이 다함께 잘 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자 역사적 소명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대상기관은 즉각 이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 시급하다

지방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무리한 예산 차입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전국 16개 지자체의 지방 부채 증가액이 3조9천496억원에 달했다. 광주시의 경우 일시 차입금 1천50억원, 지방채 570여억원 등 모두 1천629억여원의 부채를 끌어다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무려 264억여원의 이자를 물게 됐다. 광주시는 집행액 대비 차입비율도 전국 평균인 6.2%보다 높은 9.0%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역시 지방재정을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1인당 1인당 세입 감소액이 14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감세정책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나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그러나 감세 정책에도 기업 투자는 살아나지 않는 반면 지방재정만 엄청난 타격을 입는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도 효과가 의문시된다.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내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로는 세입 감소분을 채울 수 없다. 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사업·도급 재정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광배해 있다.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세정책 재검토가 요구된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떼어내는 비율을 더 높이고 지방교부세율도 최소한 현재 수준(내국세의 19.24%)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 존립은 재정 자립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도 정부의 지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세출 구조를 합리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無 等 鼓

수확기를 맞아 산지 쌀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농촌이 요동치고 있다. 벼는 갈아엎기에도 천막농성이 뒤따르고, 각 지역마다 야적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광경이지만, 올해는 쌀값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2005년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돼 위기감이 더하다. 올해 전국의 예상 쌀생산량은 468만t으로, 지난해 484만t에 비해 16만t 줄었다. 그러나 소비량인 437만t에 머물러 31만t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보인다. 재고미 또한 골칫거리다. 전남지역의 재고미는 지난해 1만4천t의 두 배가 넘는 2만9천t에 달한다. 민간소비량은 줄고, 재고량은 넘치니 쌀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참여정부 시절까지 매년 재고미 가운데 40만~50만t을 소화해왔던 대북 지원 쌀이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정상화 함께 참고에서 묵히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쌀값 대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詰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6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론대우부 2200-679	디 자 인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 제 부 2200-641	제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